



## 고병원성 A1 방역에 드론·장비 투입 정읍시, 철새도래지 소독·통제 등 선제적 차단방역



전북 정읍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한 철새도래지 소독과 통제 등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

최근 경기(문산천)와 경남(낙동강)에서 H5형 A1 항원이 검출되고 유럽과 대만,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철새도래지(동진강, 고부천 등)와 주변 도로 소독을 위해 광역방제기 등 소독 차량 4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특히 2월 3일부터 드론을 추가 투입해 소독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방역취약지역까지 소독을 실시하며 A1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통

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시행되는 오리 사육 제한을 2019년도 22호에 40만수(12억원)에서 2020년도에는 33호에 60만수(16억원)로 확대 실시한다. 또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과 차단 방역 시설 보강에도 5억원을 투입해 튼튼한 방역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철새가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위험 시기”라며, “모든 가금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와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읍시청 [2020. 2. 4]

March 2020

## 시 막바지 차단방역 고삐 죄다 충북도, 4대 중점 방역 추진

충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막바지 차단 방역에 고삐를 죄다.

충북도에 따르면 3월부터 남부지역에 머물던 철새의 북상시기와 농경지 출입이 잦아지는 영농시기까지 겹쳐 올 겨울 마지막 고비로 판단, 농가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오리 휴지기제 종료 농가에 대해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등을 병행해 신규 입식하는 농가의 입식 절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역취약분야 대책으로 경작과 가금사육을 겸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이용한 논밭갈이 후 축사 출입 전 사용기구와 의복을 소독하고 세척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별점검기간인 오는 28일까지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 발판소독조 등 소독설비 구비 및 출입차량과 시설 등에 대한 소독실사와 기록관리 여부를 점검하면서 잔반 급여 농가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아리 유통이 증가하는 봄철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22개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6개소)에 대해 월 2회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지정된 판매장소 이외 판매를 금지하면서 판매 후 청소와 소독 여부 및 가금거래 상인에 대해서는 이동승인서 휴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적기에 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해 개체별 면역력을 높여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시설 보강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올해 가금분야 12개사업 55억원의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이상혁 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새의 북상이 완료되는 3월말까지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2년 연속 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대전일보 [2020. 2. 17]



## DUCK'S NEWS

##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축산차량 GPS 장착 당부

##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 :

차량번호 :

전북 정읍시는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축산용 차량에 GPS 시스템을 장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 등록과 GPS 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 방역 등 효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등록 대상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퇴비, 왕겨, 톱밥, 가축 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하는 차량이다.

또 진료와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축산관계 시설은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수집판매소, 가축시장, 가축 검정 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이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시설 출입 차량으로 등록 전후 3개월 내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정읍시에 등록된 차량은 2월 현재 기준 총 1,264대가 등록돼 있다.

등록비는 농기에서 부담하지 않으며 농가는 월 4,5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미장착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읍·면·동 또는 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등으로 GPS 장착이 안 된 차량이 운행할 수도 있다"며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만큼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어떠한 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2020. 2. 17]



March 2020

## “오리 재입식 늦어질 게 뻔해...실질적 피해 보전을” 전남도, 오리사육 휴지기제 기간종료 일괄연장 논란



전남도가 오리사육 휴지기제 기간 종료를 앞뒀던 농가의 사육제한 기간을 이달말까지로 일괄 연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1월말~2월초 오리사육 휴지기를 끝낼 예정이었던 농가 12곳에 대한 사육제한을 2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리사육 휴지기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진행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하주기로 인해 11월보다 이른 시기에 참여한 농가는 그만큼 일찍 끝낼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정부지침이 개정됐다.

그럼에도 전남도가 사육제한 기간을 연장한 건 2월초 중국 후난성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다. 인근 국가에서 터진 AI의 국내 유입을 우려한 전남도가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농가들로부터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농가들은 휴지기 연장에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는 입장이다. 97% 이상 계열화가 진행된 오리산업의 특성상 농가가 연장을 거부해도 부담을 느낀 업체가 입식 신청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사육을 시작할 방법이 없어서다.

한 농가는 “지자체와 싸워가면서까지 농가에 오리를 입식해줄 업체는 없다”며 “농가들도 달리 선택지가 없어 동의서에 사인을 한 것”이라고 푸념했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다수 농가의 휴지기가 끝나는데 날짜가 같아지면 일부는 재입식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식 신청은 한꺼번에 몰리지만 업체가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새끼오리의 양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엔 일부 농가가 5월초까지 입식 순번이 밀려 ‘홀로 휴지기’를 보낸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남 나주와 영암에서 오리 6만여마리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지난해 재입식 지연으로 4회전은 나와야 하는 오리사육이 3회전에 그치면서 7,000만 원에 가까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며 “정부도 이런 농가상황을 인정해 지침까지 개정했는데, 같은 피해가 자꾸 생기면 방역에 대한 농가의 참여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휴지기 연장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보상금 지급기간이라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휴지기가 끝나는 날까지가 아닌, 농가가 실제 입식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보상금 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휴지기 연장으로 일부 농가의 입식이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연장에 동참해 입계 될 농가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민신문 [2020. 2. 19]

## DUCK'S NEWS

## 축평원,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 실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1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0년 닭·오리·계란 이력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시행되는 유통단계 준수사항인 최소포장지의 이력번호 표시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은 가금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인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다. 지원절차는 업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장비 수량과 금액이 결정돼 통보된다. 이후 업체가 해당 장비를 구매해 설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축평원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업체별 지원금액을 정산한다.

▶ 한국농정신문 [2020. 2. 23]

## ‘닭·오리·계란 이력제’ 소비시장 새바람 축산물 수급·안전먹거리 만족도 UP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의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축산물 수급과 소비 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축평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 이력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면서 “축산물 위해요소 발생시 이력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회수 조치 가능한 이력제가 소비자와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닭·오리고기와 계란은 포장대상 축산물로 반드시 포장해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지에 이력번호가 원활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닭·오리

고기와 계란만의 고유 ‘이력번호 구성체계’를 마련하고, 이력번호 번호 표시장비 설치를 지원해 현장의 원활한 제도 이행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력번호는 도축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등이 발급신청하면 출하농장 정보와 함께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100% 전산화되고, 이력정보는 유통단계별로 연계·관리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이력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제공된다.

또한 전국 도축장 53곳에서 도축 신청되는 모든 닭·오리에는 12자리 이력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력번호는 출하농장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축공정별 특성에 따라 농장구분이 어려운 경우 도축신청 품종별로 여러 농장에 대해 이력



번호를 발급 신청 가능하다.

축평원 관계자는 “닭·오리·계란 이력번호는 생산·유통단계별 이력정보를 기본으로 담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금축산정보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계란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란 이력제’가 도입, 시행 중이다.

계란 이력번호는 같은 농장, 같은 산란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 가능하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만 발급·표시된다.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 계란 종량별 또는 제품별 거래처별 등 이력번호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발급 신청 가능하며, 이는 모두 선택 사항이다. 계란 이력제(12자리)는 계란의 생산, 선별포장, 판매 등 단계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록·관리하고,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산농장, 사육환경, 계란 선별포장 정보 및 계란 판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력제는 생산·유통 단계별 신고제로 계란 이력정보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계란 시장을 피치마켓으로 바꿔 축산물 소비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오리·계란 이력제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수급관 측에 적극 활용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아시아투데이 [2020. 2. 24]

